

교육 선진화 비전 공개 토론회

교육강국 2012



재단
법인

여의도연구소
The Youido Institute

토론회 프로그램
PROGRAM



교육강국 2012

개회 사회 : 박재완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부소장)
인사말 박세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장)
축사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기조연설

『교육선진화를 위한 제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주제발표

『교육강국 2012』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패널토론 및 종합토론

사회 : 서정화 (홍익대 교수)

토론 1 권대봉 (고려대 교수)
토론 2 김대유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 실현연대 대표)
토론 3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본부장)
토론 4 백순근 (서울대 교수)
토론 5 이경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토론 6 이원희 (교총 수석 부회장)

교육강국 2012 목차 CONTENTS

6 인사말

박세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소장)

8 축사

박영식 (광운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주제발표 『교육강국 2012』

11 교육강국의 비전

1. 한국교육의 위기
2. 변화와 도전
3. 비전의 필요성

18 교육강국 3대 전략

1.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2. 정치 과잉에서 '학생중심'으로
3. 관치와 무책임에서 '자율과 책무'로

22 교육강국의 목표

1. 교육강국의 모습
2. 교육강국 7대 목표

32 교육강국 8대 과제

1. 학생중심 교육의 강화
2. 교육안전망의 구축
3. 자립형학교의 확대
4.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관리 체제 확립
5. 입시제도의 장기적 개선
6.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
7.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 강화
8. 교육네트워크 구축

교육강국 2012

교육 선진화 비전 공개 토론회

인사말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여의도연구소장 박세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여의도연구소에서 준비한 '교육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박근혜 대표님, 박영식 총장님,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를 맡아 주신 이주호 의원님과 사회를 맡아 주신 서정화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의도연구소는 명실상부한 정책연구소로서 국가와 당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연구소의 첫 번째 공개토론회로서 '교육 강국 2012'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더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재산이 바로 국가 경쟁력 이고, 그것이 곧 국민들의 삶의 질 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교육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고, 사교육은 번성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경쟁력은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입시를 둘러싼 고교등급제 등의 문제가 국론분열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교육 현실을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한다면,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요원한 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적 자원 이외에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선진화가 없는 나라 선진화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도전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단합하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닌 이러한 저력의 근원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제대로 진단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으로 나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썸튼 오늘 이 토론회가 교육 선진화를 위한 좋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연구소가 교육선진화 방안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로 쓰일 것이며, 우리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가 알찬 결실을 거두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박영식 (광운대학교 총장)

오늘 여의도연구소에서 한국의 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 강국 2012”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경쟁이 局地的 경쟁이 아니고 세계적 경쟁으로 되고 있으며, 교육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되어있는 시기에 우리의 교육을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있는 일로 생각하면서 이 토론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육은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를 성공적으로 마감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무한 경쟁을 수반하는 세계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에 우리가 교육을 어떤 이념과 방향에서 어떤 정책들로 밀고 나가느냐는 21세기 한국의 국력과 위상을 결정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지금 제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제1단계의 교육을 산업화 시대의 교육이라면 제2단계의 교육은 세계화 시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교육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전에 교육에 중사했던 교육자들은 산업화를 성취하는데 그들의 기여가 컸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며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중학교 입사와 고등학교 입시를 거치고, 대학 본고사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5개 안팎의 명문 고등학교가 형성되었고, 그 학생들이 명문 대학들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입사한 후, 공장에서 땀 흘리고, 사우디에서 모래 바람 맞고, 007가방 들고 세계시장을 누벼 이룩한 것이 산업화입니다. 산업화는 결코 굴러들어 온 것도, 그냥 생긴 것도 아니고, 자신감에 찬 교육 엘리트들과 그 밖의 수많은 산업전사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써 이룩된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는 “가난에서 벗어나 보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일념으로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생산에 몰두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때는 아직 파이도 없었고 격차도 없었기 때문에 평등과 분배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생산을 발목잡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산업화라는 엄청난 과제를 불과 30년 만에 완수할 수 있는 것은 그 때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교육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산업화는 교육 엘리트들의 노력에 의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서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세계화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경쟁을 局地的 경쟁이 아닌 세계적 경쟁으로 만듭니다. 한 마디로 세계화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사회적 개념으로는 정보사회 또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합니다. 지식이 최대의 자본이요,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인 사회라는 뜻입니다. 1990년 이전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교육의 수월성이란 개념을 사용했지, 교육의 경쟁력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이란 개념은 세계화 시대에 造語된 용어입니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가 얼마나 경쟁의 시대이고 교육의 경쟁력을 요청하는 시대인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교육은 당연히 자유를 기반으로 한 교육, 경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으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자율화되어야 하고 다양화 되어야 합니다.

자율성과 다양성 속에서만 교육이 창의성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세계화 시대에서의 교육의 방향은 자유를 바탕으로 한 경쟁적 교육체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을 견디기 위해서도, 2인불 시대의 고비를 넘기 위해서도 교육의 방향은 이 방향이어야 합니다.

1990년 이전 세계화 시대 이전에는 교육의 수월성이란 개념을 사용했지, 교육의 경쟁력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의 경쟁력”이란 개념은 세계화 시대에 造語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유를 기반으로 한 경쟁적 교육체제를 밀고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사회가 산업화 시대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고통도 가난의 설움도 경험하지 아니한 젊은 세대들도 있고, 상반된 이익집단도 있으며, 자유·생산과 평등·분배라는 상충된 이념갈등도 있습니다. 이제는 파이가 커져서 생산보다 분배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사회가 매우 복잡다기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평등·분배에는 다수가, 자유·생산에는 소수가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는 가진 자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취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좋은 학교 나온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오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정치체제라고, 어리석은 무리(Demo)에 이끌리는 정치, 그들의 욕구를 외면할 수 없는 정치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쟁력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와 생산을 지향해야 하고, 다수와 뜻을 의식해서는 평등과 분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느냐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하느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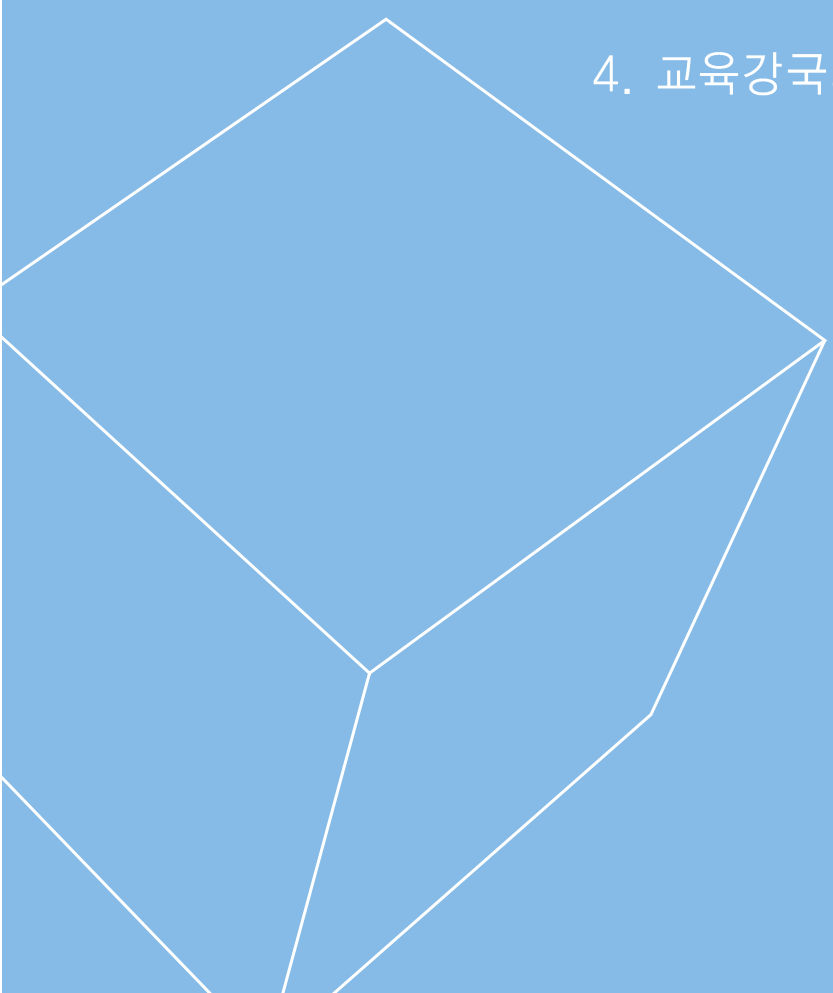
물론 명분 상 국가의 장래를 내세워야지, 표를 내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이원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등에 기반한 교육체제와 자유에 기반한 교육체제가 그것입니다. 80% 이상의 다수를 위한 평등 교육체제와 20% 이내의 소수를 위한 자유 교육체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를 구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체제는 세계의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의 중국에서도 이러한 체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육체제의 이원화는 만년을 무릅쓰고라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 능력 있는 자의 학력을 신장하는 교육, 경쟁력 있는 교육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일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의도연구소가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일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평준화 바람에 의하여 교실이 붕괴되고, 사회가 무기력해져 있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마련된 교육 선진화 전략이 교실을 되살리고 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크게 비약하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주제 발표 : 교육선진화비전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

교육강국 2012

1. 교육강국의 비전
 2. 교육강국의 3대 전략
 3. 교육강국의 목표
 4. 교육강국의 8대 과제
- 

교육강국 2012

교육강국의 비전

1. 한국교육의 위기

우리나라는 교역규모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교육부문에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교육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교육은 우리 사회가 '산업화'를 거쳐 '민주화' 되는 과정에 발맞추어 순기능을 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교육이 고도 경제성장에 필요한 우수한 산업인력을 배출해냄으로써 '산업화'에 기여하였고, 80년대부터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교육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대학총장의 직선제가 확산되고 교원노조가 합법화되는 등 교육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서 '선진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우리 교육이 선진화되지 못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는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학교붕괴, 교실붕괴로 일컬어지는 공교육의 부실은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몰아 사교육비의 팽창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약 7조 규모이던 사교육비는 2003년 13조6천억원 규모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저학력의 대물림

무너진 공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붕괴는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만은 가난과 학력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부모들의 소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교육 이민의 급증

교육문제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교육이민 역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2002년 유학이나 이민으로 해외로 나간 초중고교생의 수가 2만8천명에 달한다. 보통 서울 한 개 구(區)의 평균 초등학생수가 약 3만 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적신호이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선진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혹은 몽고에까지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학생의 전체 순위는 과학 1위, 수학 2위, 언어 6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상위(level 5)에 속한 학생비율을 보면 캐나다 17%,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로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너지는 교단

우리의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표 2>는 우리의 교육현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얼마나 불신과 갈등에 싸여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 교장에 의한 교사 평가가 조사대상 국가들 중 모두 최하위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의 민주화를 거치면서 발생한 부작용들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는 것이 곧 교육의 민주화이자 선진화를 위한 과제이다.

[표1] OECD 주요 국가들의 학력평가 점수

구 분	Korea	Japan	U.S	U.K	France	Germany	Sweden	Canada	Italy	Mexico
과학성적순위	1	2	14	4	12	20	10	5	23	30
수학성적순위	2	1	19	8	10	20	15	6	26	30
언어성적순위	6	8	15	7	14	21	9	2	20	30

언어성적분포

level 1 이하	1%	3%	6%	4%	4%	10%	3%	2%	5%	16%
level 1	5%	7%	12%	9%	11%	13%	9%	7%	14%	28%
level 2	19%	18%	21%	20%	22%	22%	20%	18%	26%	30%
level 3	39%	33%	27%	27%	31%	27%	30%	28%	31%	19%
level 4	31%	29%	21%	24%	24%	19%	26%	28%	19%	6%
level 5	6%	10%	12%	16%	8%	9%	11%	17%	5%	1%

출처 : OECD(2000), *Knowledge and Skill for Life (First Results From PISA 2000)*

[표2] 교사평가

구 분	Korea	Japan	U.S	U.K	France	Germany	Sweden	Canada	Italy	Mexico	OECD
학생평가	순위	27	18	4	1	19	24	7	6	21	13
	평가지표	-0.67	-0.17	0.34	0.50	-0.20	-0.34	0.21	0.31	-0.28	0.07
교장평가	순위	26	10	18	13	N.A.	16	5	11	25	3
	평가지표	-0.72	0.14	-0.04	0.02	N.A.	-0.01	0.34	0.08	-0.69	0.39

주 : 1) 학생평가는 27개국, 교장평가는 26개국 조사 순위임

2) 평가지표는 다수 항목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one-parameter item response model (WARM estimator)에 의거하여 지표화한 값으로서, 전체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된 것임.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ISA 2000 참조.

출처 : OECD(2000), *Knowledge and Skill for Life (First Results From PISA 2000)*

저조한 대학 경쟁력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있다. <표 3>은 2003년 IMD가 2,000만 명이상의 인구를 가진 국가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 경쟁력의 순위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고학력자의 비중(25~34세 중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중)에 있어서는 3위로 나타나서, 우리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적인 측면과는 달리 매우 실망스럽게 나타난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체제의 경쟁력은 30개 국가 중에서 2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최하위권인 28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급기술자의 공급 측면에서도 25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교육(education in finance)의 경우에도 23위로 나타난다. 다만 대학의 지식이 기업에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에 관하여서는 16위로 중위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우리 경제의 지식경제사회로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 IMD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대학의 경쟁력

항 목	한국	캐나다	일본	영국	중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독일	멕시코
고학력자 비중 ¹⁾	3	1	2	9	25	7	2	10	11	13
교육체제 경쟁력 ²⁾	21	2	27	13	15	5	7	18	20	24
대학교육 경쟁력 ³⁾	28	3	30	15	25	8	1	27	23	21
경제교육 경쟁력 ⁴⁾	23	2	25	4	30	6	4	26	19	24
고급기술자 공급 ⁵⁾	25	5	14	28	29	4	15	22	20	23
대학과기업간 관계 ⁶⁾	16	3	13	10	23	8	1	29	7	28

- 주 : 1) 고학력자 비중: 25-34세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의 비중.
 2) 교육체제: 교육체제가 경쟁사회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하고 정도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설문 조사 결과.
 3) 대학교육: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정도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경제교육: 경제교육(education in finance)이 경쟁사회의 수요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 정도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5) 고급기술자: 자격을 갖춘 기술자 (qualified engineers)가 노동시장에 얼마나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가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6) 대학의 지식이 기업에 얼마나 잘 전달 (knowledge transfer)되고 있는 지에 대한 기업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출처 : IMD(2003),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 변화와 도전

우리사회는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 산업화시대에서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면서 필요한 인재상이 변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은 교육개방에 대한 내부의 필요와 외부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구성원들의 생활방식도 함께 변화해 가고 있다.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안팎의 문제들 까지 응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식기반사회

우리나라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재개발에 대한 투자와 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량생산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이 중요했다면, 지식사회에서는 핵심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두뇌와 각 사회 및 학문분야별 전문가를 길러내야 한다.

세계화 시대

세계화는 자본과 상품의 이동을 가속했을 뿐 아니라 인재와 노동력이 이동하는 문턱도 낮추고 있다. 세계 유수의 기업과 대학은 국경을 넘나들며 우수한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적에 상관없이 인재들을 확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해외에 학교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등교육은 물론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도 교육개방의 압력을 받고 있다. 좋은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외국의 학교가 국내에 설립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이 시급히 제고되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

우리사회가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다. 한 가정에 한 아이만을 출산하는 추세는 확산되면서 아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발견하고 길러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고령화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모실 줄 아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없는 아이들이 늘어감에 따라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3. 비전의 필요성

우리사회가 당면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개혁 방향의 설정과 비전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관련 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것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비전 수립 없이 정권을 이양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수에 의해 성급하게 개혁과제가 설정되었고, 그 집행방식도 관료들 동원한 조급한 밀어붙이기식이었다.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실패가 되풀이 되면서 교육정책의 방향은 지향점을 잃고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수권을 준비하는 야당은 이러한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선거에 임박하여 급조된 공약으로는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없다. 설령 얻는다 하더라도 조악한 공약만으로 국민들이 소망하는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 차별화된 정책으로 현 정부와의 건전한 정책경쟁을 통해 발전적인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보여줄 때 국민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전의 수립을 통하여 교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한다. 뒷걸음치는 우리 교육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비전 설정과 실천을 통해 2012년 교육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교육강국 2012

교육강국의 3대 전략

현재 우리 교육은 하향 평준화, 정치 과잉, 관치와 무책임이라는 3가지 함정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12년까지 교육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명확한 목표 설정과 더불어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상향 평준화, 학생중심의 교육, 자율과 책무의 교육의 3대 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1. 하향평준화에서 ‘상향평준화’로

하향평준화의 함정은 교육에 있어서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잘하는 학생을 끌어내리고 잘 하려는 학교, 열심히 하려는 교원의 발목을 잡는 과오를 범하는 경우이다. 교육의 형평을 강조하는 평준화의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평준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평준화는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교육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뒤쳐지는 학생의 수준을 끌어 올리고 문제가 있는 학교를 독려하고 노력하지 않는 교원들이 노력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여야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갈 경우 하향평준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을 끌어내리는 하향 평준화로부터 탈피하여, 잘하려는 학교와 대학에게는 대폭 자율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는 뒤쳐지는 학교와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립형 학교’들을 많이 허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립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립형 학교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도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저소득·저학력 학생들이 지금과 같이 방치되면 학력세습과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학력 학생들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정부가 시작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매년 파악하는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뒤쳐지는 학생, 뒤떨어지는 학교들에 대하여 우수교사를 파견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진학하는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을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원하는 경우 특성화 고교 혹은 통합형 고교로 전환되도록 하고, 전문대학이 산업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제는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 교육을 연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뒤쳐지는 대학, 특히 지방대학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원정책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을 지원할 때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 대학들에 집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거나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타 대학과 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치 과잉에서 ‘학생중심’으로

교육 정치화의 함정은 우리 교육에서 정치의 거품이 지나쳐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교육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문제이다. 우리 교육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교육감 선거, 대학 총장 선거, 교원노조의 활동 등이 학교 내에서 교원 간, 학교장과 교원 간, 교원과 학부모·학생 간 등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교육 민주화를 진전시키면서 한 번은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교육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정치의 거품을 걷어내고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교육감 선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선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교육감선거는 주민직선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국립대학의 총장을 대학교수들이 선출하는 선거제도도 국립대학이사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립대학이사회에서 선출방식을 결정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 등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위하여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철저히 고민하고 그 결과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을 위한 양질의 교수·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수·학습센터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교사들의 재교육 과정도 강화하여야 한다. 교과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참고서가 없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강조하는 인성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시민으로서의 포용력을 동시에 갖출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독립교과로 하는 등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개혁에 있어서도 특성화를 통해 연구역량강화와 현장중심교육 등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먼저 수능시험은 지금과 같이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응시하게 하는 체제에서 탈피하여 미국의 SAT I 과 SAT II와 같이 이원화하여 고1까지의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마치면 수능1에 응시하고 고2~3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선택과목별로 치러지는 수능2를 통해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능을 문제은행 식으로 출제하고 한 학생이 여러 번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신제도는 대학에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하여 대학들이 고교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학생이 어떠한 고교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판단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치와 무책임에서 ‘자율과 책무’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을 추진하여 왔지만, 민간 부문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는 통제와 명령 중심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허용하고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여 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통제가 곳곳에 강하게 남아 있어서 관치 교육의 함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교육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부가 모든 학교와 대학을 세세히 간섭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되 학교의 운영과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율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자율은 충분히 양립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정부 규제는 우리 학교와 교원이 자율을 가질 만큼 능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논리로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와 교원을 묶어 두면 자율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차단하게 되는 관치 교육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학교와 교원에게 자율의 폭을 점차 넓혀주면서 자율을 책무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민간의 능력을 배양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의 모든 부분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관치 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통제에 길들여져 무기력과 무책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교육현장에 ‘자율과 책무’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와 대학에 대폭 자율을 허용하고 난 후 성과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충분히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가 교육 현장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해서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는 교장 교사, 학생·학부모, 지역사회 등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 교육부와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입시제도만 바꾸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개혁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부터 개혁의 고통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에서 학교와 대학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덜어내고 행정 서비스 제공에만 집중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을 개혁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인력을 대폭 줄여 현장 학교 혹은 대학의 인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학교에서는 유능하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능력 있고 리더십 있는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석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교원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등 교원인사 제도를 개혁하여야 한다.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교육부 주도의 평가와 연계함으로써 이것이 대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이러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지방의 우수 교수들에게 지원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강국 2012

교육강국의 목표

교육강국의 모습

인재상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춘 인재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갖춘 인재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학교상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발달을 책임지는 학교
입시경쟁을 위한 학교가 아닌, 배움과 친구가 있는 학교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취업 걱정이 없는 학교

사회상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
모든 조직과 단체가 지속적으로 지식을 창출하는 자생적 학습조직사회
지역사회와 교육계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활기찬 교육네트워크사회

국가상

교육을 통해 다양성이 길러지고 사회통합이 이뤄지는 국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배출하는 국가

교육강국 7대 목표

2012년까지

- 1 모든학생들이 국가수준의 필수학업성취도에 도달하도록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 2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는 자립형 학교를 전체 고교의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4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발달을 책임지는 전문성 높은 교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 5 사교육비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 6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90% 이상으로 높ی겠습니다.
- 7 국내 10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교육강국의 미래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교육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대 목표의 설정배경과 추진방향을 살펴본다.

1. 모든 학생들이 국가수준의 필수학업성취도에 도달하도록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국가는 매해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필수학업성취도를 정하고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끌어 올려야 한다. 학교 선택권이 없고 수준별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학생의 학업성취에 대한 진단은 더욱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체제와 지도프로그램이 없다면 뒤쳐지는 아이와 다른 아이들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격차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사교육이 공교육을 대체하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학력격차가 저학력,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학교교육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예방하고 줄여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잠재능력과 소질개발이라는 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곧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빈부격차의 고착화로 사회통합을 해치고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교육과정과 평가시스템 개발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수준의 평가는 교사와 학생의 객관적인 의사소통 과정이며, 평가결과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부모들에게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교육정보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학생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영어, 컴퓨터, 예체능 교육을 사교육이 아닌 학교교육으로 끌어들어야 한다. 또한 저학력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과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내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교과서와 학습자료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2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다양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차이와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하다 보니 학교교육이 실효성을 잃었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매우 높아 졌다. 아버지의 경제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진학을 결정한다고들 한다. 무너진 공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 자녀들이다. 이들은 내실 있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부담할 처지도 아니다.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대학입시의 특성화, 다양화는 과외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부추겨 경제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계층의 자녀들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형평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평균에 맞춘 획일적 교육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악이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우선 학교정책부터 전환이 필요하다. 자율적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립학교에게는 더 많은 자율을 주어야 한다.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록금책정 등의 권한을 학교로 위임하고 정부의 재정지원과 간섭도 배제해야 한다. 한편 농어촌 지역과 도시 내 저소득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선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자립형 공립학교가 그것이다. 자율권과 행·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게 하고, 우수교사를 파견하는 등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자율성 확대가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지금은 교육부의 규제로 학력우주의 학생선발이 이뤄지고 있다. 학력중심 선발과 사교육의 확대는 저소득층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감소 시켜왔다.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대학에 부여하면 대학은 각자의 교육이념이나 학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 기준을 제시하고, 그 결과 학력중심의 줄 세우기식 서열구조도 파괴될 것이다. 대학의 자율에 의한 입시전형의 다양화는 이러한 저소득층에게도 보다 질 좋은 교육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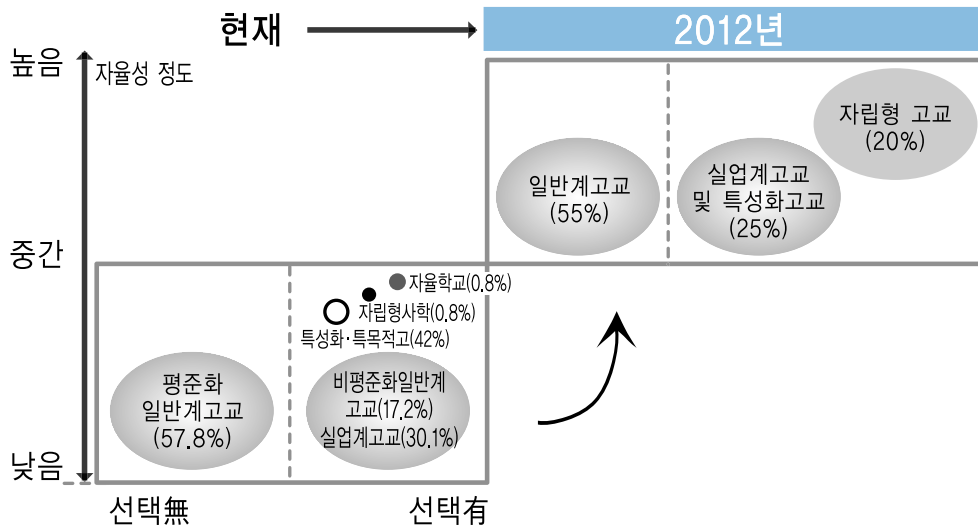
3.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는 자립형 학교를 전체 고교의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립형 학교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모든 학교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화를 강제하기보다는 자율적인 능력을 갖춘 학교가 변화를 선도하고 나머지 학교들 간에도 건전한 경쟁을 조성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개혁을 앞당겨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양호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학교들에게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본래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율권을 대폭 신장시켜 사학 본연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도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보다 우수한 교원을 파견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종교단체, 학부모 등 지역사회도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자립형 학교를 2012년까지 전체 고교의 20% 수준인 400여개까지 늘려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 하나 이상의 자립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림 1] 학교선택권과 자율의 정도에 따른 학교개혁의 목표



4. 학생의 학업성취와 인성발달을 책임지는 전문성 높은 교직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강국 건설의 성공여부는 교사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교사의 참여가 공교육 활성화와 내실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교육강국을 위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양성, 연수, 평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는 각각 현장성 전문성 책무성 제고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올바른 인격형성이라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보상체계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변화되어야 한다.

우수한 교사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전문성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학교교육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우선 신규 교원 양성단계에서부터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현장 실습기간을 늘리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자격증 재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초빙제 확대 실시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경력구조를 다양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을 통해 결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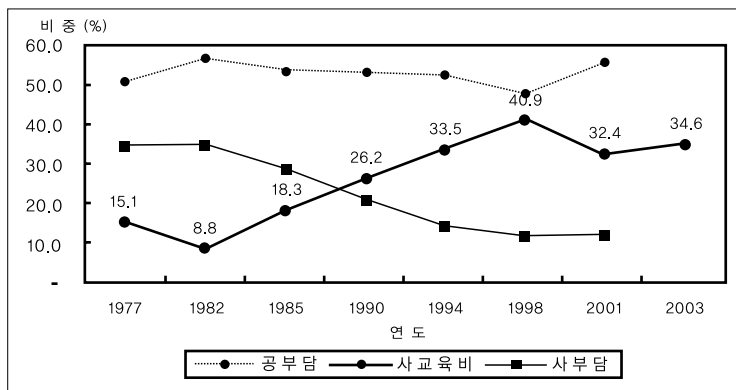
5. 사교육비를 지금의 4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다. 2001년에 10조 6,634억원이던 사교육비가 2003년에는 무려 23.6%가 증가하여 13조 6,485억원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지출규모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졸속적인 미봉책이 아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근본적인 정책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야 한다.

학교에서 특기·적성 교육 및 예체능교육을 강화하여 전체 사교육비의 35%를 차지하는 예체능부문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립형 학교, 교육안전망, 우수교원양성 및 수준별 수업 확대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지출에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에는 지금의 4분의 1로 줄여 나갈 것이다.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국내에 많이 생겨난다면 서열화된 대학 입학에 대한 과열 입시경쟁이 완화되어 결국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 규모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입시제도 개선으로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면 과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그림 2] 우리나라 교육비 구조와 사교육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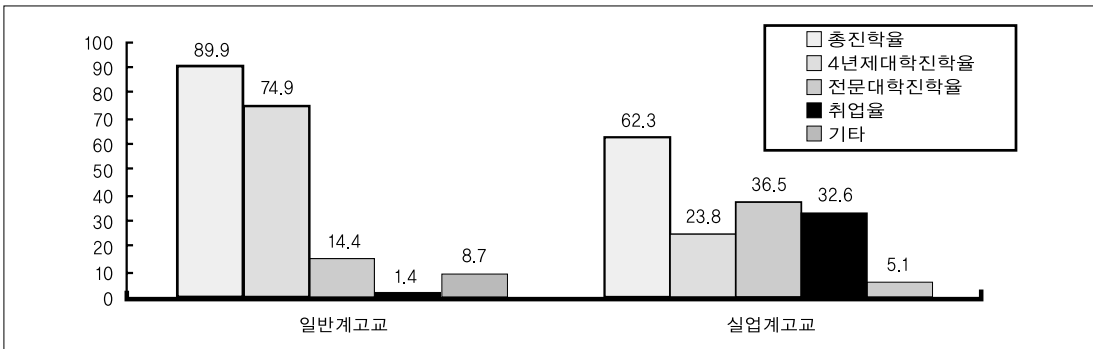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의 교육비조사연구』 (김홍주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1), 『교육비조사연구』 (공은배 외)
 한국교육개발원 (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최상근 외)

6.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겠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력, 정보능력, 의사소통 능력과 같은 기본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학은 수요자 중심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취업률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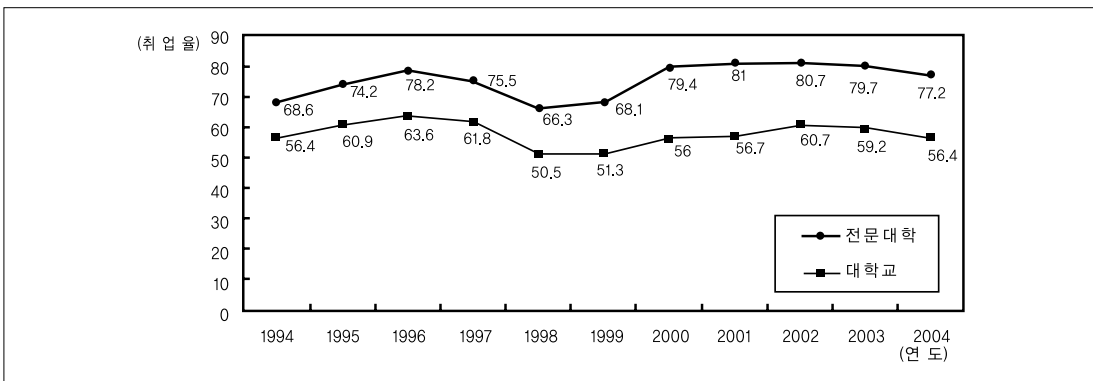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최우선 목표로 대학의 역할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학사과정과 교원자격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대학의 자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추어 취업률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해 평가받는 대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러한 현장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전문대학과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을 현재 67% 수준에서 2012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여 갈 것이다.

[그림 3]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현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교육통계연보』

[그림 4] 최근 10년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취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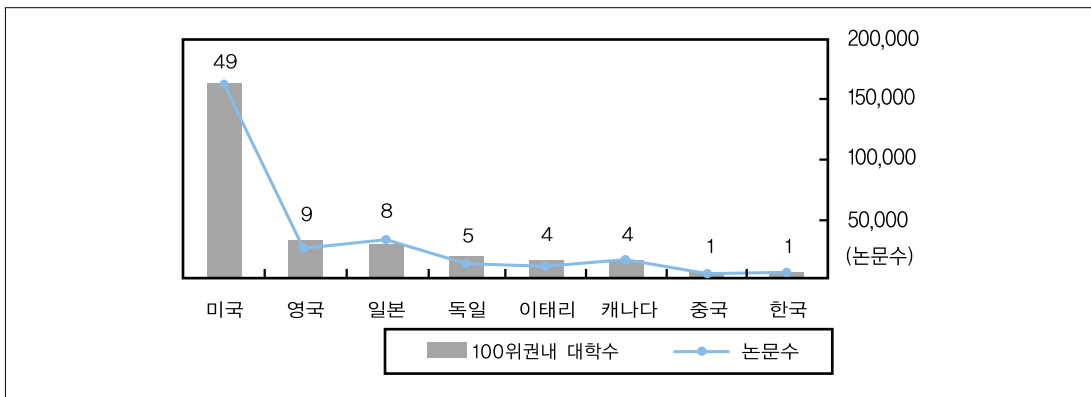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0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동향 분석』

7. 국내 10개 대학을 세계100권 안으로 진입시키겠습니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의 기술력 및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국내 대학들이 다른 나라의 우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정부가 대학 10개교를 미리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그 결과 10개교의 세계 일류대학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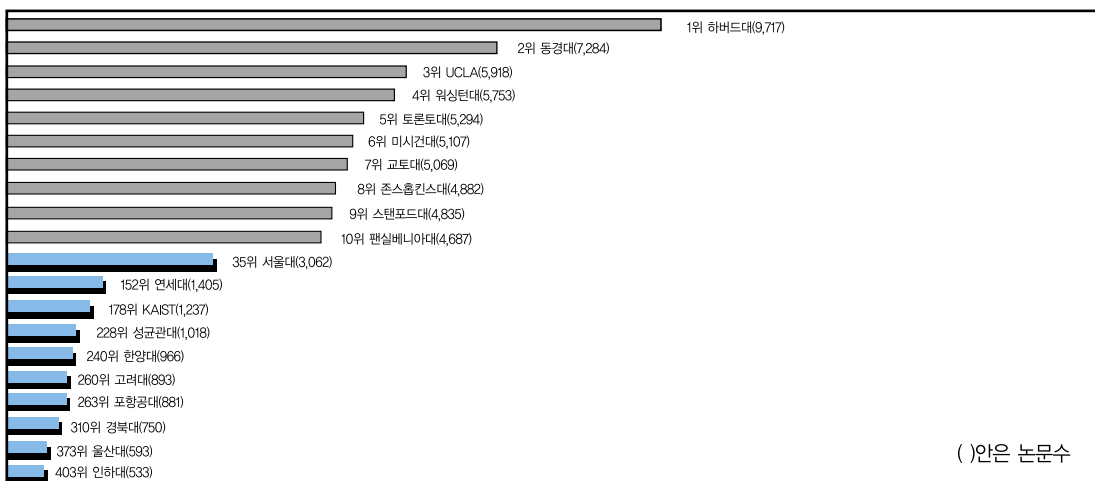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우선 대학의 자율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사립대학들에게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학사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행의 재정지원 방식보다 과감한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하여 2012년까지 국내 10개 대학을 세계 100위권 안으로 진입시킬 것이다.

[그림 5] 국가별 SCI기준 100대 대학 현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한국 연구자의 2003년도 SCI인용지수분석』

[그림 6] 한국 및 세계 10위권 대학 현황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한국 연구자의 2003년도 SCI인용지수분석』

교육강국 2012

교육강국 8대 과제

1. 학생중심 교육의 강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국인, 세계인,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며 또한 이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철저히 고민하여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개선해 나가는 학생중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학교를 '다니기 싫은 학교'에서 '다니고 싶은 학교'로 혁신



1.1 인성 및 역사 교육의 강화

- 아이들의 인성 함양을 위해 토론수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능력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기초질서교육과 예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의식을 고양하며 남을 배려하는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강화
-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포용력을 갖추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바, 국사, 근·현대사, 세계사 등 역사교과를 독립교과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교육내용의 편파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계기수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사 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고, 해당 문제 발생 시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팀을 구성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

1.2 영어, 컴퓨터, 예체능 교육의 강화

- 학교교육만으로 누구나 일정 수준의 외국어 소통능력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학교가 책임 지도하기 위하여 우선 원어민 교사를 2012년까지 최소 4,000명 이상 확보하고, 영어 캠프를 설치·운영하여 비싼 영어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도록 컴퓨터 교육과정을 실습 위주로 개편, 활용능력을 향상시켜 저소득층 아이들도 정보화 능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중점 교육
- 학생들의 인성 함양, 특기·적성개발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내 예체능 교육을 확대하여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서로 협력하는 스포츠 정신을 기르도록 함

1.3 학교내 수준별 수업의 확대

- 학생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여 뒤떨어지는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의 효과를, 잘하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의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습결손의 누적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
- 수준별 수업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의 실천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자료 개발을 지원하며, 수준별 학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수준별 학습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뒷받침

1.4 양질의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 교육과정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수·학습센터를 활성화하여, 교사는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학업 수행을 통해 학습동기 유지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 국정 대상 교과를 시장 실패 교과목으로 한정시켜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판매수익금을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며, 정기적인 교과서 검정체제를 수립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충분한 연구기간 및 예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참고서가 필요 없는 질 좋은 교과서 개발

2. 교육 안전망의 구축



방 향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뒤쳐지는 학생, 뒤떨어지는 학교들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교사를 파견하는 학업향상 목표제도를 도입하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 활동, 특기적성 교육, 영유아 교육·보육 등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지원체제를 구축



정책과제

2.1 학업성취도의 측정과 학업향상 목표제도의 도입

- 정부가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저학력 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교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단계적으로 공개
- 각 학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학업향상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노력하도록 유도하며 그 성과를 예산 지원과 우수교사 파견 등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위 학교의 학업향상 목표제도 도입

2.2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 현재 주로 사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특기적성 교육에서 저소득층 자녀가 소외되고 있는바, 저소득층 자녀가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특기적성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제 구축

2.3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구축

- 아동의 주요 능력이 조기에 형성되어 그 이후의 교육성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 구축

2.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 확대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고등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전액 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학자금 융자 대상과 액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학자금 융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3. 자립형 학교의 확대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교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립 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도록 허용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은 받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를 도입하며, 실업계 고교교육이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교와 통합형 고교'로의 전환을 대폭 활성화



3.1 자립형 사립학교의 대폭 확대

- 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사학 본연의 건학이념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학의 육영의지를 막을 이유가 없으므로, 국고 지원 없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자립형 사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여 현재 6개교에만 허용하고 있는 자립형 사학을 대폭 확대
- 자립형 사학을 지금과 같이 교육감이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허용하는 준칙주의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자율의 폭을 확대하며, 재정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

3.2 자립형 공립학교 제도 도입

-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생 및 학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를 포괄적으로 면제해 주면서도 기존의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립학교 제도 도입
- 자립형 공립학교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등을 중심으로 허용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납입금은 공립수준으로 하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학교에는 자율적 운영을 보장

3.3 특성화 고교 및 통합형 고교의 확대

- 전문 직업 인력 조기 양성을 목표로 특화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실업계 고교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가지는 특성화 고교로 대폭 전환
- 실업계 고교 중에서 일반과정과 직업과정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진학 혹은 취업과정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된 통합형 고교로 전환 유도

4.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성과관리 체제 확립

방 향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학생 개개인에게 지극한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교원 양성·연수 체계를 현장 교육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 학교에서는 유능하고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수석교사제도와 교원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리더십 있는 교장이 학교를 운영하도록 교장초빙제도를 확대 실시

정책과제

4.1 교육현장 중심의 교원 양성 제도 확립

- 교원 양성단계에서 교사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교과교육학 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1년으로 늘려 현장에 적합한 교원을 양성하고, 초임 발령 이후 일정 기간동안 지정된 교사의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
- 교원양성기관의 강좌 등 양성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시와 평가인증제 도입을 통한 양성단계부터의 철저한 질 관리

4.2 교원연수 및 평가제도 개선

- 교원이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교원연수 모듈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
- 지금까지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온 현행 교원 근무평정 제도를 전면 수정하여 교원의 지속적인 전문성 관리를 위한 평가 제도 마련 및 시행
- 교사자격증 취득 후 지속적 보유를 위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원의 권위를 강화

4.3 교장초빙제 확대 실시 및 수석교사제 도입

- 능력 있는 교장들이 민간기업의 CEO와 같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재 시범 적용되고 있는 교장초빙제를 단계적으로 보완·확대
- 교장승진 위주의 단선적인 경력체계에서 벗어나 교단교사도 능력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능력 있고 열심히 하는 교사를 우대

4.4 교원 보수체계 개편

- 현행 경력위주의 보수체계에서 벗어나 교사의 업무별 특성을 파악하여 업무수행 반영 비중을 높이고,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유급휴가, 학비지원, 해외 연수 등 다양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의 인센티브 제공

5. 입시제도의 장기적 개선



방 향

입학전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장기적으로 대학에 일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수능 이원화와 문제은행식 출제로 복수응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고교종합평가제, 입시사정관제도, 고교정보공시제도를 도입 수험생들이 적어도 5개 대학까지는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선택권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입시제도를 장기적으로 개선하고 더불어 앞에서 제시된 공교육 강화방안 등을 통해 사교육비를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경감



정책과제

5.1 수능시험 이원화와 응시기회 대폭 확대

- 1년에 1회로 제한되어 있는 현행 수능시험을 이원화하여 국민공통교육과정과 선택과목에 대해 별도로 실시하고 응시기회를 현행 1회에서 복수로 확대하여 학생들의 입시 중압감을 경감

5.2 고교종합평가제와 입시사정관제도, 고교정보공시제도 도입

- 입시에서 대학의 선발기준이 지원 학생의 학력뿐만 아니라 출신학교에서 받은 다양한 인성 교육,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신에 반영할 수 있는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 대학의 입시사정관이 고등학교를 순방하면서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고교별 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학전형에서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 특성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육성할 수 있는 입시사정관제도 도입 지원
-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이념, 교육 프로그램, 학업성취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고교정보공시제'를 도입하여 학교정보를 공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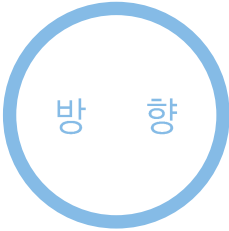
5.3 학생들의 대학선택권 확대

- 학생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신과 가장 잘 부합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가·나·다 군별 분류에 따른 실질적 제한을 폐지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5개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대학입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 및 일선 고교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기관을 마련하여 인적·시간적 비용 소모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시 환경 조성

5.4 대학입학전형의 완전자유화

- 현행 대학입학과 관련된 교육부의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입학전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2012년까지 대학에 돌려주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입시전형 형태의 다양화와 인재양성 방식의 다양화 유도

6. 세계적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



방 향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바, 정부는 대학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법인화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우 지역거점 대학육성을 통하여 대학의 체질을 강화



정책과제

6.1 '선택과 집중'의 대학 지원체제 확립

- Post-BK21 등 향후 대학 연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열심히 노력하는 우수 대학에 재정 지원을 집중
-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점차 줄여 나가는 대신 우수 교수의 연구에 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학 연구자의 유인을 증대하고 대학 간에 우수한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유도
- 대학의 연구능력 신장을 위해 우수 인력의 이공계 대학원 진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바, 기초학문 및 국가전략 산업의 박사과정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연구지원 펠로우(Research Fellow)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

6.2 국립대학 법인제도의 도입

-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수준은 계속 증대시키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설치하고,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하며, 총장이 실질적인 CEO 역할을 하는 국립대학법인제도를 도입하여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성 확보

6.3 지역거점 대학의 육성

- 대학간의 M&A가 단순히 폐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동반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방대학 간 특성화를 통한 원활한 자체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방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 2012년까지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하여 지역거점대학이 부상하도록 유도

7.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 강화

방 향

우리의 대학이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무 능력을 갖춘 實事求是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대학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대학별·학과별 취업률을 상세히 공개하며, 전문대학과 실업계 고교의 연계를 강화

정책과제

7.1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

- 대학에 지급되는 재정 지원을 대학의 연구에 대한 지원과 대학의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지원으로 이원화하고 후자에 대한 지원을 점차 늘려감으로써 대학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정, 지향하는 목표에 맞는 현장중심의 교과과정을 운영하도록 유도

7.2 대학 교육과정과 교원의 현장성 강화 및 규제 완화

- 교원에 대한 자격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가 교단에서 별 어려움 없이 강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 급변하는 시장과 기업의 필요에 적합한 기업체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재교육이 용이하도록 유연한 학기제, 다양한 교육과정 및 등록제 등을 도입

7.3 대학별·학과별 졸업생 취업상황의 공개

- 각 대학의 학과별 졸업생의 취업률을 비롯한 취업상황을 노동부 고용DB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집계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대학간 혹은 대학내 학과간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을 유도

7.4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 강화

- 실업계 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전문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바, 전문대학 교육을 실업계 고교와 보다 강하게 연계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양성

8. 교육 네트워크의 구축

방 향

우리사회의 역동적인 교육열과 빠른 정보화 추세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학교와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과 연결되어 평생에 걸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

정책과제

8.1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연계 강화

- 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바 현재와 같이 일반 행정과 완전히 분리된 교육행정제도를 수정하여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연계를 강화
- 현행 교육감에게 한정되어 있는 공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권한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사회주민들에게도 허용하여 다양하고 활기찬 학교운영을 유도
- 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

8.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지방단체나 NGO,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각종 현장체험 프로그램들을 네트워크로 구축하여 관심 있는 개인이나 학교, 단체 등이 원하는 주제의 체험학교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체험학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의 문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직장인 모임이나 동호회, 부녀회 등 자신들의 직업이나 취미 생활을 교육봉사활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마련

8.3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범정부 차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 조율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 기관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재교육 학습 분위기를 조성
- 저소득, 저학력 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보장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및 생산복지 체제 구축
- 모든 기관이나 단체 등 조직이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고 전파하는 자생적 학습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강국
2012



재단
법인 **여의도연구소**
The Youido Institute

150-8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TEL : 02-2070-3300 FAX : 02-2070-3330